

< 3.19(토) 조간 (인터넷 3.18(금) 16:00 이후) >



보도자료

- ▶ 2011. 3. 18(금) 배포
- ▶ 총 7쪽

▶ 고용정책총괄과장 김부희
▶ 서기관 권진호(sanha86@moel.go.kr)
T E L : 02-6902-8187,010-2649-6351
F A X : 02-502-6855

❖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, 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지원” 강조

-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(3.18, 금) 개최 결과 -

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의적 불확실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.

-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「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」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<「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」>

- (추진체계) 고용노동부는 장관 직속으로 「일자리 현장 지원단」을, 지방관서장 직속으로 「일자리 현장 고용지원반」을 구성
- (주요역할) 구인정보 파악, 일자리 관련 규제, 인력채용·운영상 애로 사항 파악·해소

- 이 날 회의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유가상승, 일본 대지진 등 외부적 변수의 불안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”며

- “각 부처는 물론,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”고 했다.

□ 저소득층 자녀 1만명 취업을 돕기 위한 「내 일 점프 프로젝트」도 본격 추진된다.

○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○ 「내 일 점프 프로젝트」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자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센터에 의뢰하면, 고용센터는 1대1 취업후견인을 지정해 개인특성에 맞게 상담, 훈련,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
- 이 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·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미래성장산업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과 폴리텍 대학 선발시 우대하고,

- 실업자에게만 발급되는 내일배움카드를 졸업 직전 학기의 재학생에게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.

*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

○ 박재완 장관은 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, 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치중한 결과 ‘일을 통한 빈곤탈출’은 미흡했다”고 지적하며

- “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은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디딤돌이자 희망”이라고 말했다.

□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는 「지역 일자리 공시제」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.

* 3월 17일 현재 244개 자치단체 중 216개 자치단체 참여

□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「2011년 시니어 창업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」을 보고했다.

- 퇴직 시니어의 창업역량 제고를 위해 퇴직인력의 경력·특기·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고,
 - 창업교육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과도 연계해 지원한다.

□ 한편 고용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상당수가 조율·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(11. 1. 12)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38건 중 13건을 개선하고 13건은 부분개선 하기로 했다.
 - 나머지 1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.
- 박재완장관은 “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애로사항을 제안하고, 중앙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<개선사례>

- 사회적기업이 용자 및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도록 중소기업에 포함(서울 제안)
 - ☞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(11말) <중소기업청>
- 지방공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마련(대구 제안)
 - ☞ 지방공기업 유연근무제 추진방안 마련(4월), 공기업 정원관리, 예산 복무 등 관련 규정 정비(6월) <행정안전부>
- 지역일자리센터 전문상담사 교육 지원(충북 제안)
 - ☞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공(6월),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마련(언제) <고용노동부>

○ 이 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다며 '정부지원 일자리의 효율화'를 제안했다.

-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"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자리 사업으로는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다며, 누수가 발생하는 독부터 정비하는게 우선이다"고 했다.

-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「(가칭)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TF」를 구성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.

□ 이 밖에 전라북도 완주군의 「두레농장 조성사업」 및 예술경영 지원센터의 「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양성」 사례 발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및 협조사항에 대한 건의 등이 있었다.

<첨부 1> 제1차 고용정책회의시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사례

<첨부 2>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 자료

<첨부 1>

제1차 고용정책조정회의시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사례

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

소 속	담당자 (직급)	연락처
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	이청일 (5급)	042-481-4541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	권혁정 (5급)	02-6902-8472

□ 자치단체 건의 내용

○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어 항구적으로 자금융자 및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 (서울)

□ 관련 현황

- 현행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만을 중소기업자로 하고 있어, 비영리조직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은 포함되지 않음
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

□ 검토 의견: 수용

- 비영리법인·단체를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을 개정중(국회제출, 의안 10459호)

* 개정안 제2조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

2.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

- 법 개정 완료 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

*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자동포함되므로 지역신보법은 개정 불필요

지방공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제시

소 속	담당자 (직급)	연락처
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	함경수(6급)	02-2100-3824

□ 자치단체 건의 내용

-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(대구)

□ 검토 의견: 수용

- 지방공기업의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,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
 - 단시간 근로제(주40시간 미만 근무), 탄력근무, 근무시간 선택, 집약근무, 집중근무제, 재택근무,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
- 지방공기업에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일·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일자리창출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

지역일자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 국비지원 및 교육지원

소 속	담당자 (직급)	연락처
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	박상윤 (5급)	02-6902-8418

□ 자치단체 건의 내용

-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전문상담사 국비지원 및 교육지원(충북)
 - * 시도(4명)·시군(2명) 이상 전문상담사 배치소요액 지원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상담기법 등 사이버교육 강좌 개설

□ 검토 의견: 수용

- 예산 편성상 전문상담사에 대한 국비지원은 곤란한 상황이나
 - 지자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*(48명)에 대해 예산을 지원**하는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
 - *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업능력 판정,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계획 수립,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 현황 등의 관리 전담자
 - ** 전국으로 직업상담사 배치를 확대 추진 예정('12년)
-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대상 사이버교육 및 집체교육 추진 (6월)
 -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'교육 공동활용' 방식*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강의 콘텐츠를 제공(활용 가능한 강의: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심리 과정)
 - * 행정기관들이 공통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의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센터에 공유(포팅)하여 활용하는 방식
 - 또한 광역단위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체교육 실시